

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(풍수해·폭염) 대책 추진

- ‘국민생명 보호’를 최우선 목표로 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
-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가(267곳), 경사지 태양광(96곳)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관리
- 무더위쉼터 민간포털사이트에 표출, 폭염대책비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 지원

□ 반지하·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·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,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.

-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오늘(19일)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(풍수해, 폭염)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*동안 하천변·지하차도·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,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.

* 풍수해(호우·태풍) : 5.15~10.15, 폭염 : 5.20~9.30

-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‘국민생명 보호’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 신속한 사전통제·대피와 폭염3대 취약분야* 집중관리를 추진한다.

* 고령 농업인, 현장 근로자(공사장 등),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

① 풍수해(호우·태풍) 주요 대책

□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*가 발생한 경우,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.('23년 수도권 시범운영 후 적용지역 확대 예정)

* 강우 50mm/1시간 및 90mm/3시간 동시 관측되는 상황

- 또 자치단체·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(재난안전통신망, sns단체대화방)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.

□ 아울러, 하천변·지하차도·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,397개소를 지정했으며(5.15 기준, 5월까지 지속 발굴 예정), 해당 지역은 담당자(공무원, 이·통장, 자율방재단 등)를 지정하고,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,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.

- 특히, 반지하 주택가(267곳)와 경사지 태양광(96곳)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

□ 또한, 지하공간(반지하, 지하주차장 등)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,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(물막이판, 개폐형 방범창 등)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,

-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('22.9월, 행안부),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('23.2월, 주택관리사협회)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.

□ 끝으로 환경부 홍수취약지구 390개소, 농림부 노후저수지 17,080개소, 산업부 산지태양광 3,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(점검 등)를 추진하고,

-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*하고, “국방신속지원단”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.

* 피해주택 지원 기준 상향(반파시 8백→면적별 10~18백, 전파시 16백→면적별 20~36백)

② 폭염 주요 대책

□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.

*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('20.5.15.~), 정식운영('23.5.15.~)

□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,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·이장·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.

- 또한, 고령 농업인이 논, 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,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.

-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.
 - 아울러,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,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.
- 사회·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천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,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.
 - * 취약계층 전기요금 상향 지원(가구당 '22년 4만 원 → '23년 4만3천 원, 경로당 '22년 11만 원 → '23년 11만5천 원)
-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. 또한,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.
-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,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.
 - 국민들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.
-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,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, 신속한 집행도 독려한 바 있다.
-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.” 라고 말하며,
 - “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 박정호 (044-205-5230)
		담당자	사무관 주으뜸 (044-205-5234)
	재난관리실 기후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 오영석 (044-205-6360)
		담당자	사무관 김웅기 (044-205-6364)

참고

작년('22년) 대비 달라지는 주요 사항

		2022년	2023년
 풍수해	재난문자	호우·태풍 특보 시 행안부 및 지자체에서 발송	극단적인 호우* 시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 (23년 수도권 시범운영) *50mm/1h, 90mm/3h 동시 관측
	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	하천변, 지하차도, 둔치주차장 등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설정·관리* *사전예찰·통제·주인 대피 실시	기존 유형 외에 반지하 (267개소), 경사지 태양광 시설 (96개소) 등 추가 발굴
	지하공간 침수예방	민간에서 침수 방지 시설 자력 구비	지자체에서 민간 공동주택 및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사설 설치 지원
	피해 복구비용 현실화	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전파 시 16백만원, 반파 시 8백만원 지원	피해주택 면적별 전파 시 20~36백만원, 반파 시 10~18백만원 지원
	대응훈련	기관별로 기존 피해 양상을 고려한 훈련 실시	극한 강우 (시우량 100mm/h1)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
 폭염	폭염특보	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 ※ 습도를 포함한 “일최고체감온도” 기준 폭염특보 시범운영('20년~)	습도를 포함한 “ 일최고체감온도 ” 기준으로 폭염특보 정식운영
	폭염 대책비	폭염대책기간 시작 후 폭염대책비 최초지원(6월, 100억원)	폭염대책기간 시작 전 폭염대책비 지원 및 규모 확대 (5월, 124억원)
	통화 연결음	폭염행동요령을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	폭염행동요령 등을 음편동 사무소, 보건소 통화연결음 으로 설정하여 홍보